

오피니언

| 오늘과 내일 |

‘한반도 프로세스’가 버려야 할 것들

박근혜 대통령은 중앙언론사 정치 부장들에게 방미(訪美) 성과를 설명하며 한국 안보에 대한 믿음을 준 것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미국의 확고한 동의와 지지를 받은 것을 알선했다. 개성공단 대화 제의는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발판 삼아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담은 첫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통일부가 나섰지만 실상은 박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보낸 대화 제의다.

그런데도 북한은 중앙특구개발지 도총국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대화 제의를 거부하며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로 지칭하며 “주제넘게 떠벌였다”고 막말을 퍼부었다. 중앙특구개발지 도총국은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말단 차관이다. 총국의 책임자도 아닌 대변인을 남한 대통령 공격수로 내세운 북한의 속셈이 무엇일까. 북한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최고 존엄 모독’이라며 길길이 뛰었을 것이다.

개성공단은 이미 옆질러진 물이다. 북한이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서지 않는 한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 통일부가 회담 제의를 꺾었던 데 대해 북한에 유감을 표명했지만 놓친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드는 것밖에 안 된다. 북한은 ‘(남한의) 현 정권을 상대해야 하는지, 상대해 해결될 것이 있는지를 검토 중에 있다’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대통령이 의욕을 보이고 미



방형남

논설위원

hnbhang@donga.com

국의 지지를 얻었다 해도 남북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서 교훈을 찾았으면 한다. 햇볕정책은 과정인 첫 남북 정상 회담은 성사시켰지만 목표인 남북 화해와 평화 정착에는 실패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햇볕정책의 행로를 따라가지 않으려면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

먼저, 무오류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김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작품인 햇볕정책을 만들어낸 그대로 밀어붙였다. 그는 햇볕정책에 관한 한 마치 중세시대 교황처럼 무오류 권(無誤謬權)을 행사했다. 문제가 생겨도 참모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햇볕정책 수호에 몸을 바쳤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정책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문제가 드러나면 수정하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대통령이 대화 재개에 집착해 통일부를 들리거나 꼭두각시로 만들면 북한이 먼저 통일부를 우습게 본다.

둘째, 초저임금 대신 상황 적응이 필요하다. 김 전 대통령은 북한이 세

제인의 측제인 월드컵 기간에 서해 도발을 했는데도 햇볕정책을 고집했다. 남북 관계는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만들어 놓은 틀에 상황을 억지로 맞추면 결과는 낭패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아시아에서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와 협력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역내 국가들과 더욱 돈독한 신뢰를 쌓을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일본 아베 정권의 역주행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외교부 장관의 방일을 취소하고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중일 정상회의도 포기했다. 상황에 따른 변화다. 일본에 한 일을 북한에 못할 이유가 없다.

셋째, 막히면 돌아가야 한다. 김 전 대통령은 여론의 반대를 무시하고 대북(對北) 퍼 주기를 계속했다. 박 대통령이 주도한 대화 제의는 세 차례나 거부됐다. 북한의 반발을 예측하지 못해 햇볕질을 계속하면 국민의 신뢰도 떨어진다.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신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최소한 5년을 내다보는 장기 목표이기에 실패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과정으로서의 ‘프로세스’가 성공하려면 도중에 ‘프로그램(진전)’이 쌓여야 한다.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서 프로세스만 강조하면 공허한 외침이 될 수밖에 없다.

| 형설수설 |

‘반구대 청장’

변영섭 문화재청장은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를 보존하는 운동을 10년 넘게 해 왔다. 국보 285호인 반구대 암각화는 약 7000년 전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바위에 동물과 사람 모습을 300점 이상 새겨놓은 것이다. 이 그림은 1970년대 이후 1년 중 절반 이상 물에 잠겨 있다. 물 속에 있는 바위는 보통 바위보다 빨리 부스러진다. 이미 훼손이 많이 진행된 상태다. 그를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과는 반구대 암각화 보존 운동을 하면서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 청장은 문화재청장 취임식에서도 “이 시대 후손의 불찰로 국보문화재가 긴 세월 ‘물고문’에 시달리며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반구대 암각화를 ‘우리 문화재의 만행’이라고 부른다.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재라는 뜻이다. ‘그림으로 쓴 역사책’이라는 표현도 한다.



그에게 ‘반구대 청장’이라는 별명이 따라 다닐 만하다.

▷문화재청은 반구대 대책을 놓고 울산시와 장기간 맞서고 있다. 울산 지역 주민들도 반구대 암각화를 자랑스러운 문화재로 생각하는 것은 똑같지만 암각화를 물에 잠기게 만드는 사면댐이 주민들의 식수원이라는 점에서 문화재청과는 입장이 약간 다르다. 변 청장은 ‘원형 보존’에, 울산시는 ‘식수원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서로 맞서기만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훼손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홍 안식 수석논설위원 chansik@donga.com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北, 나라 빚장 풀고 세계에 식량지원 호소하라

북한이 군량미(軍糧米)를 풀어 주민에게 배급하고 있다고 한다. 주요 도시에서 3개월째 군량미 창고를 열어 직장에 다니는 성인에게 매달 보름 치, 부양가족에게는 열흘 치 식량을 배급했다는 것이다. 전쟁에 대비해 쌓아 놓은 군량미를 배급용으로 풀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북한의 식량난은 절박한 듯하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할 때도 군량미를 줄이기는 했지만 주민 배급용으로 쓰지는 않았다.

북한에서 식량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올해 닥쳐 온 고통은 김정은이 자초한 것이다.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對北) 제재가 강화되면서 외국에서 보내오던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이 급감했다. 중국은 해마다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을 전후해 식량을 대규모로 지원했지만 올해는 하지 않았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이 올해 51만 t의 곡물을 수입해야 하는데 4월까지 수입량이 1만2400t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6월까지의 식량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3년간 지방세 체납하고도 돈 잘 쓰는 전두환 씨

전두환 전 대통령이 3년 이상 3000만 원이 넘는 지방세를 체납해 서울시로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대상으로 통보받았다. 서울 서대문세무서가 2003년 그의 자택에 붙은 경호동 건물을 경매하면서 발생한 세금이 미납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10년 1월 지방세 3017만 원을 부과했으나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다. 체납액은 가산금이 더해져 4000여만 원으로 불어났다. 이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의 이름은 12월 공식적으로 공개된다.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평소 청빈하게 생활해 온 나머지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 대신 내주겠다고 나서서 국민이 줄을 설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런 일과는 관계가 멀어 동정은커녕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몇몇 시민단체 회원들은 그제 전 전 대통령 집 앞에 몰려가 “불법 재산을 환수하고 연간 7억여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경호를 중지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 비자금을 축재한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일부만 내 1672억 원이 미납되어 있는 상태다. 그는 2003년 “예금 29만 원이 전 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듬해 숨겨 뒀던 서울 강남의 땅 51평

김정은은 지난해 4월 김일성 100회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주민의 허리띠를 다시는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북한 주민은 이 말을 듣고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졌을지 모르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민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하지만 군량미 배급은 주민을 일시적으로 무마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그나마 일반 주민은 장마당 영업과 개인 돼지발 농사로 최악의 고비를 넘기고 있지만 군인들은 보급 사정이 급격하게 악화돼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동부전선을 통해 남한으로 넘어온 ‘노크 귀순’ 병사도 배가 고파 음식물을 훔쳐 먹어야 했다고 증언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통계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기대 수명은 69세로 남한 주민보다 12년이 짧다. 김일성 일가의 68년에 걸친 독재가 초래한 참사이다. 김정은이 지금이라도 북한 주민을 살릴 생각이 있다면 나라의 빚장을 열고 세계 각국에 인도적 지원을 호소해야 한다. 북한이 대결 정책을 포기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온정의 손길을 내밀 것이다.

이 발견돼 압류됐다. 수시로 측근들과 어울려 골프를 즐기는 모습도 포착됐다. 지난해 6월에는 육군사관학교에 1000만 원 이상의 발전기금을 낸 동문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추징금의 시효는 3년이다. 검찰은 시효가 지나면 추징금을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만료가 임박하면 통상적으로 재산 압류 등 강제 집행에 나선다. 그러나 추징금 가운데 일부라도 납부하면 그때부터 시효는 다시 3년 연장된다. 전 전 대통령은 이를 악용해 2010년 10월 강연으로 번 수입이라고 주장하며 300만 원의 추징금을 납부해 시효는 올해 10월까지 연장됐다. 올해에는 또 어떤 ‘꼼수’를 쓸지 궁금하다.

마침 오늘은 5·18민주화운동 33주년이 되는 날이다. 5·18민주화운동의 본질은 신군부가 5·17 비상계엄 확대와 김대중 씨의 강제 연행에 항의하는 시민과 학생들의 시위를 공수특전단을 투입해 유혈 진압한 것이다. 전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11대와 12대 대통령, 그리고 군사반란과 광주 유혈 진압의 장본인이라는 두 개의 얼굴을 지녔다. 전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광주를 찾아 진술하게 사죄하고, 숨겨 둔 재산이 있다면 단 1원도 남기지 말고 내놓는 속죄의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일자리 대물림’은 사회 정의에 어긋난다

울산지법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유족을 특별채용 하도록 한 현대자동차의 단체협약 규정이 사용자의 인권을 침해했으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족의 채용을 단체협약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일자리 대물림을 낳아 사회 정의에 배치되며, 취업 희망자들을 좌절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현대자동차에서 정년퇴직한 이후 재직 중에 얻은 질병(폐암)으로 2011년 사망한 황오 씨 유족이 “아들을 특별채용해 달라”며 제기한 고용 의무 청구소송에서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 유족의 ‘일자리 대물림’에 법원이 제동을 건 첫 판결이다.

산업재해로 가정을 잃게 된 유족은 생계가 막막해진다. 적절 한 보상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공정한 채용 경쟁을 거치지 않은 일자리 대물림은 청년 실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빼앗는다. 기업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족에게 일자리 대신에 위자료 5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재판부의 판단은 이런 점에서 사리에 맞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 대기업 노조원들의 일자리 대물림은 국민 사이에 반발을 부르고

있다. 신입 사원을 채용할 때 장기 근속자나 정년퇴직자의 자녀를 우대하는 단체협약은 더 납득하기 어렵다. 현대자동차를 포함해 국내 200대 기업 중 32.5%가 단체협약에 직원 가족에 대한 채용 우대 조항을 두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직원 자녀들은 부모가 재직했던 회사 문화를 잘 알고 있고, 충성도가 더 높을 수도 있다. 그러나 회사 경영진이 기업 경쟁력 차원에서 판단할 몫이지, 단체협약으로 강제할 사항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흑인 히스패닉 등 소수 인종에 대한 입학 우대제도조차도 역차별 논란으로 인한 시비까지 불었다.

우리 사회는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는 계층 간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부유층의 편법적인 부(富)의 대물림이 비판을 받는 것은 공정한 경쟁과 평등한 기회를 막기 때문이다. 대기업 노조의 일자리 대물림도 양극화를 고착시키고 공정사회를 저해한다. 대기업 노사는 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회 통념에 맞게 단체협약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 노조도 사용자 측에 경제민주화만 요구하지 말고 공정사회를 위해 스스로의 사회적 책임을 고민해 볼 때가 됐다.

신용의 상징·비밀표
유한양행
www.yuhan.co.kr
광고심의필:1199-1100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전해보세요!

어려운 건강관리 쉽게!
온가족 건강관리 **베콤씨**

몸에 필요한 비타민B와 C에 항산화 성분까지 채운 베콤씨로, 온 가족의 건강도 챙겨보세요.
건강 두 알은 가족 영양제 베콤씨로 가족 모두 활력을 되찾으세요.

비타민B·C+항산화성분
베콤씨정

UDCA와 아연을 더한
베콤씨에이스

미네랄과 코엔자임 Q10을 더한
베콤씨이브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본드시 의사 처방과 상담하고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유한양행 소비자 상담실 080-024-1188 (수신자 요금부담)